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12명 압수수색

당시 대응 과정 전반 재구성 투표지 부족 보고 경로 추적 노태우등 뒷선 수사확대 전망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내부의 판단 및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과정과 현장 보고 체계, 이후 대응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본이 출범 직후부터 속도를 내며 진행돼 왔다. 합수본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11 일에도 선관위 관련 기관을 압수 압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실 7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 운영을 담당하며 선거 당일 잠지 부총장 상환 관리를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태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내부의 판단 및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과정과 현장 보고 체계, 이후 대응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본이 출범 직후부터 속도를 내며 진행돼 왔다. 합수본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11 일에도 선관위 관련 기관을 압수 압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실 7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 운영을 담당하며 선거 당일 잠지 부총장 상환 관리를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태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대응 등을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로 상급 기관에 전달됐는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지시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안수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선관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계획하며, 이후 노태우 전 위원장과 허철준 전 사무총장 등 '뒷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폐기 및 분실 의혹, 선관위의 의외수 출장 논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예산 낭비 및 재용 비효율 의혹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구속심사 출석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신진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방뉴스

'양평고속도 뇌물' 국토부 직원 大法, '별건 위법수사' 공소기각

김경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의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석연 대법관)는 24일 특검팀의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민중기 특검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토 동북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드워룸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이러한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2025년 10월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별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에 뇌물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달리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을 선고

했다.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에 따라 확보한 증거들을 공방으로 한 법원이 또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은 이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후 취득한 수사 정보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나 기소 권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밝혔다.

합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정당하다"며 특별법의 원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의혹들을 규명하고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한 수사와 공소 기각이 이뤄졌다는 형소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5년 12월 벌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살인·강도등 강력범죄 피해자에도 '국선변호사'

법무부,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 지원 불성실 국선변호인 자격 박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준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강도, 범죄조직 구성·활동 등 특정정경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피해 상담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으로 추가된다.

국선변호사 관리·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국선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해촉하도록 했으며,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검사장 또는 지정장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자격 박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구속심사 출석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신진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방뉴스

'재산권 무관한 계약 분쟁, 사기죄 아니냐'

大法, '법규형 원상' 파기환송 '국가 형법원 개입 신중해야'

여 기부금을 받았는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B씨 역시 D공인 계약을 전제로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B씨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행사 장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해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범위는 재산권이라며,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에 관해는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서는 기법위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계약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을 좌우할 정도로 본질적인 요인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은 A씨가 행사 장소에 속

딸 앞에서 前연인 살해... 60대 '징역 20년'

이별 통보받지 흉기 준비 범행 '기억 안난다' 심신미약 불인정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정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형사 합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8분경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

'상품권 사채'로 年 1만8000% 살인이자... 30대 구속 송치

공범 40대女도 불구속 송치

불법 대부업자가 이른바 '상품권 계약' 방식의 변종 사채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폭언과 허위 고소까지 동원해 채무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급전 형태로

빌려주 뒤 상환 시점에 현금 대신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상품권 계약판에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113명을 상대로 335차례에 걸쳐 약 2942000만원 규모의 급전을 빌려주고, 연 240%에서 최대 1만800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상환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돈만

받아 챙기고는 판매하기로 한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로 피소된 인원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B씨는 대출 자금 관리와 장부 정리 등 운영 전반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들 외에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급전을 빌린 30대 여성이 지난 4월 서울을 소재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수원=임영민 기자 lim@siminilbo.co.kr

화원농협 이맘은김치

화원농협 이맘은김치 유튜브, SNS 채널에서는 화원농협의 소식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맘은김치 상품

- 화원농협 이맘은김치 쇼핑몰 (www.해남화원농협.com / www.hwkimchi.com)
- 농협몰 (www.nonghyupmall.com)
- 이마트몰 (emart.ssg.com)
- 해남미소, 남도장터
- 쿠방, G마켓, 11번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hwkimchi)

이오프라인

- 농협하나로클럽 (양재, 장동, 상남, 고양, 삼송, 수원, 목포, 광주 등)
- 신세계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랜드리테일
- 이마트몰 (emart.ssg.com)
- 해남, 목포, 영암, 완도, 진도지역 학교급식
- 해남 관내 관공서 및 병원
- 목포, 부산대리점

절임배추	포기김치	묵은지
김치양념	맛김치	백김치
절임알타리	통통시미	